

“광주시교육청 재원 여력 없다”면서 “누리에산 우선 편성하라”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가능한 재원 모두 활용해도 400억원 부족
전남교육청은 겨우 14억 남아... “시설개선 손 놓으란 말이나”

“靑 코드감사” 강력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내놓은 “편성이 가능하다”는 발표와 상반된 것으로, 당장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관련,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 사실상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부와 광주·전남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했다.

감사원은 우선,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4월 1일 기준 부족한 누리과정비는 721억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321억원)을 전부 활용해도 4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 명의로 낸 “광주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상반되는 감사 결과다.

광주교육청은 더 나아가 “감사원이 활용 가능하다는 321억원의 절반 가량은 이미 6월 추경으로 편성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도 올 해 말 예산 금액”이라며 부족 금액이 400억원을 넘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판단됐다.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전액 편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만 놓고 보면 가능한 재원 818억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부족액(804억)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만 챙기면 시급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은 아예 손을 놓고 있으란 말이나”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관련,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내 대형 로펌 3곳과 한국 공법학회 추천 교수 3인,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등도 “현장을 모르는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육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실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위국 광주시교육감)도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된 점, 교육부 입장과 유사한 감사 결과에 지난 4대감 감사 때 보여준 감사원 행태 등과 맞물려 ‘정치 감사’, ‘코드 감사’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 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올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6억 50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 분회의로 넘겼다.

광주시교육청도 어린이집 예산을 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56억)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월 농촌의 풍경화 24일 때 이른 불볕더위를 식힌 단비가 내린 뒤 활짝 개인 날씨 속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화순 교리의 육묘장에서 농민들이 모내기 사용할 모판을 옮겨 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00만원 밖에 갠 성매매 여성 ▶6면

이젠 문화시민-대전예술의전당 ▶18면

KIA 김호령 수비·공격 ‘호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해외도시 ‘5·18 기념식’ 위상 변화 호남 출신 주도→교포 전체 행사로

5·18재단 올 기념행사 분석
23곳 중 17곳 한인회서 주최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올 들어 호남향우회에서 현지 한인회를 주최 측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교포사회 전체의 기념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 5·18이 지난 수십 년간 호남의 비극이자 호남의 기념일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던 탓에 호남교포 중심으로 5·18 기념행사가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해외 9개 국 23개 도시 중 17개 도시가 기념행사를 현지 한인회 중심으로 개최하거나 장소를 한인회관으로 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18기념행사를 연 30개 안팎의 해외 도시 전체가 사실상 호남향우회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과 비교하고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주최 측 변화는 5·18이 국가기념일인 것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5·18재단은 설명했다.

5·18재단에 따르면 올해 5·18 기념행사를 한인회 중심 또는 한인회가 장소를 제공해 개최한 도시는 미국의 경우 시애틀, 시카고, 뉴욕, 워싱턴, 달라스, 휴스턴 등 6개 도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양, 단둥, 대련, 상해 등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호주 시드니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회관에서 5·18기념식이 열렸다.

5·18재단은 주최 측 변화 외에도 종영사관 등 공관 관계자의 기념식 참석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포사회가 주도해 진행된 5·18 기념식에 우리 외교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무총리 5·18기념사를 대독하는가 하면 교포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한 해외도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 5·18을 알리고 기념하는데 앞장섰던 호남향우회가 한인회로 중심을 넘겨주고 해외 공관 관계자들이 기념식을 적극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5·18재단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해외 5·18기념식에 해당 지역 공관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호남향우회에는 5·18이 국가기념일인 만큼 한인사회 전체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라는 사실이 해외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개천절, 광복절, 3.1절과 함께 해외 한인의 4대 기념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주최 측 변화와 해외 공관 관계자 참석 등 외교부 지원 모두 현지 교포사회에서 5·18은 함께 기념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8월부터 주식거래 30분 연장... 오후 3시30분 폐장

오는 8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거래 마감시간이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이에 맞춰 서울 외환시장과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시장의 운영시간도 함께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올 8월1일(월)부터 증권·파생상품 및 금 시장의 정규장 매매 거래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장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로, 일반 파생상품시장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거래소는 증시의 시간의 시장 운영을 30분 줄여 전체 증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규장 종료 후의 시간의 시장 운영은 2시간50분(오후 3시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20분(오후 3시40분~오후 6시)으로 단축된다. 증시 매매시간 변경은 2000년 5월 점심시간(12~13시) 휴장 폐지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호 소 문

최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광주서구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건설현장과 일조환경이 열악하다는 피해당사자인 농성1동 지역개발 예정지의 1,000여명의 주민과 시행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조권 및 녹지보존계획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그리고 시/구 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사실 왜곡으로 잘못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주변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불균형 속에 수십 년간 살아오며 동네 발전을 염원해온 지금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들이 지역에 일조권 위법 주장을 제기 하기 전에 “단 한 번의 현장 실태파악”과 “단 한 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들로 인한 사회적 잡음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 내심 개발을 통하여 얻어지는 주민들의 희망적인 삶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조피해를 가장 심하게 보는 가구의 주민들은 그로 인한 엄청난 보상도 멀리하고, 감히 생각도 못할 배려로 지역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주십시오”라는 호소가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 지역의 개발 사실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현장을 통한 사실에 입각 대변을 할 것이며, 시/구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장을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지역개발에 몸부림치는 농성1동 1천여명 주민의 바람에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 농성1동 개발추진위원회 -